

# 전북 바이오산업 생태계 기반 다진다

# 임신·출산 지원 시책 확대 추진

### 도, 지자체·병원·대학 등과 '전북미래의료포럼' 개최 역거점병원을 바이오산업 연계 연구중심병원 도약 목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거점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시켜 미래 의료는 물론 바이오산업의 생태계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포럼을 열었다.

전북자치도는 18일 전북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김인태 전주부시장, 허전 익산부시장, 전북대 양오봉 총장, 원광대 박성태 총장, 서울대 강대의 교수, 고려대 김병수 교수, 이규택 전북TP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미래의료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고려대 김병수 교수의 기조 발표를 통해 지역거점병원의 역할로 대두되고 있는 연구중심병원 모범 사례를 설명한 데 이어 보건산업진흥원 박정선 연구중심병원 지원단장의 제2기 연구중심병원 추진 동향 등에 대한 발제가 이뤄졌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강대의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 교수와 박 단장, 조용곤 전북대 의생명연구원장, 고점석 원광대 의생명연구원장, 양지훈 넥스트&바이오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연구중심병원과 바이오특화단지의 미래 발

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포럼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중심병원 모범 사례, △제2기 연구중심병원, △연구중심병원과 바이오특화단지 연계 등을 논의하며 연구개발과 임상, 사업화, 제품개발, 진료로 선순환 체계 확립 및 기술 고도화에 대한 심도 높은 토의가 펼쳐졌다.

강대의 교수는 "의생명산업은 진료를 통해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병원과 대학이 연구역량을 확보하여 사업화하는 체계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병원, 대학의 상생·협력으로 진료와 연구의 균형을 통해 바이오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지역 연구개발 인력 양성·공급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자치도는 풍부한 혁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목전에 두고 있다. 또한,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병원과 함께 혁신적인 의료역량을 키우는 것은 물론 특화방안 모색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앞서 나가는 미래 의료 및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저명한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새로운 도전과제와 국가과제 등을 발굴해 나가는 등 의생명 산업 거점화를 위한 특화 방향과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 1억9000만원 압류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31명이 보유한 1억 9천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 즉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자산의 일종으로, 처음에는 암호화폐 등으로 불리다 지난 2021년 3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자산으로 규정됐다.

지방세징수법에 의하면 제3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해야 한다. 이때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에 제3채무자에 해당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5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3,026명에 대한 보유계정 조회를 요청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31명이 고팍스를 제외한 4곳의 거래소에 1억9,000만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 후 압류 처분했다. 압류통보를 받은 한 체납자는 254만원을 즉시 납부하기도 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압류금액은 지난해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12명을 대상으로 압류한 가상자산 1,200만원의 6배 실적이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지치행정국장은 "지난해와 비교해 가상자산 압류금액이 6배 이상 증가했고 재산은닉 양상도 뚜렷해졌다"며,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징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발대식이 18일 임실군 소재 119안전체험관에서 열렸다.

##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은 어린이 안전히어로즈가 책임진다!

### 도내 초등학교 4~6학년 117명,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위촉 자연재해 및 교통사고 대처 요령 등 실제적 체험교육 실시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발대식이 18일 임실군 소재 119안전체험관에서 열렸다.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2023년 울산광역시에서 상인 대상 안전보안관 제도를 최초로 어린이에게 적용한 사례이다.

이를 행정안전부가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3월부터 각 시군이 선정한 초등학교 4~6학년 117명의 학생을 모집·선정했다.

발대식은 위촉식을 시작으로, 안전실천 선서, 안전구호 제창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모두가 자연재난, 교통사고, 화재 등 119안전체험관의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들이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상황별 대처요령들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면서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선정된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학교 주변

의 위험 요소와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신고하는 학교 앞 안전지킴이로, 6월 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어린이 안전히어로즈의 활동에 대해서 봉사 시간 인정, 안전행사 개최 시 초청, 우수 신고 포상 등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어린이 시절부터 안전에 관심을 갖고 안전활동을 경험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이 평생 습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며,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활동이 활성화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난임 시술비 연명기준 폐지·산후 건강관리 등

전북자치도가 출생을 저하와 만혼 등 고령 산모, 난임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해 임신 전 주기에 걸친 다양한 정책을 내놓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적극적인 임신 준비와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임신준비-임신-출산·산후 각 단계별 지원사업을 2025~2027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난 2023년 수립한 '임신·출산 지원시책 확대계획'(신규시책 21건 도입)을 필두로 올해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공공산후조리원(2개소) 건립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올해 △타 시·도 벤치마킹 △도내 시·군 사업조사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언론·동향 등을 통한 우수사례를 조사해 수요도가 높은 15개 사업을 발굴해 내년부터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업추진 단계별로는 △임신 준비-△임신-△출산·산후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임신 준비단계는 5개 사업, 9억 원 규모로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난임(우울) 상담센터 △난임 시술비 나이 기준 폐지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난임 부부 숲 치유 운영지원 △영구 피임복원 시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다음 임신 단계는 4개 사업, 24억 원 규모로 임신 초기부터 막달까지 생리

적 증상 및 임신부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모아 건강복합센터 건립 추진 △중진 검사비 및 접종비 지원 △찾아가는 고위험임신부 건강관리 △임산부 출생 태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마지막 출산·산후 단계는 6개 사업, 77억 원 규모로, 출산 가정 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민간산후조리원 공공형 지정제도 도입을 통한 지원 △(공공·민간) 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산후건강관리 지원금 및 사용자 확대 △저소득층 저자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중점 사업으로 '모아(母愛)건강복합센터'를 건립해 임신에서 출산, 보육까지 단계별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의 의료기관·보육시설 등 연계자 및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행안부 주관의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대응해 국비 50억 원 규모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내 부족한 산후조리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3년부터 공공산후조리원 2개소를 정읍·남원에 건립하고 있으며, 남원 공공산후조리원은 2025년 상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민간산후조리원도 공공형 지정제도를 도입해 낡은 시설 개보수 및 프로그램 활성화와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임신·출산 정책 확대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전북자치도는 보다 많은 도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건전과 형평성을 감안해 사업을 기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해 필요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주거안정 위한 농어촌 임대주택 방문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어촌지역의 주거안정을 통한 도·농간 지역균형 및 인구소멸지역 대응에 총력을 쏟는다.

전북자치도는 18일 전북개발공사에서 임대관리 중인 진안 에코리파트에 방문해 입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생현장을 돌면서 소방 등 안전시설과 청결 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진안 에코리파트의 입주현황과 임대료 수준 등과 입주민들의 만족도 수준을 파악하고, 중점 개선영역을 파악하고 전북자치도는 이를 활용해 추후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동부권 농어촌지역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건립비 400억원을 전북개발공사에 추가 출자했으며, 동부권 4개 군지역에 총 375세대를 건립·공급했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북자치도가 출자하여 설립한 도내 유일의 지방공사로 저렴한 임대료를 실현하였으며, 코로나 19 등에 지친 도민의 민생회복을 위해 그간 임대료를 동결했다.

또한, 순창 순화지구·고창 덕산지구·진안 월랑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건설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귀촌인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